

## I. 문제제기

중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경제적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공산당 체제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산당 체제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즉 개발독재 체제인가? 아니면 스탈린주의의 아류로써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의 당독재 체제인가?

만약 전자로 해석된다면, 중국은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어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사회도 다원화된 이상 결국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발전 단계까지 중국이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주의를 유지해서 정치안정을 도모한 것이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중국과 같이 크고 복잡한 나라는 높은 경제수준에서도 불구하고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반면, 후자로 해석된다면, 중국은 개혁개방에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독재국가가 된다. 따라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홍위병이 판치는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1978년 말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40년 동안 중국에서 존재해온 공산당 체제는 아무런 정치개혁 없이 지속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발표한 “당과 국가의 영도제도 개혁(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 담화는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제시한 핵심 문건이다. 덩샤오핑은 특히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 가부장제 작풍, 간부 직위의 종신제 현상 및 각종 특권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이 중에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각종 폐단의 총체적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권력의 분산, 당정분리, 권력 승계의 합리화 등을 주장한다.<sup>1)</sup>

실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초기에 집단지도체제와 직무 분담 그리고 민주적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의한 결정 등을 통해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일인 독재 체제를 폐기하고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혁을 단행하여 일당 지배 하에서의 권력 분산을 실현하였다.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와 연령제한 규정을 제시하였고 간부 4화(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정책을 통해 능력 위주의 간부 선발제도를 구축하였다. 지도자의 퇴임 규정과 함께 최고지도자에 대한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을 제도화함으로써 권력승계의 제도화도 이루어졌다. 비록 천안문 사건의 여파로 정치개혁은 잠시

1) 中共中央文献委员会(编).1994. 『邓小平文选』 2卷. 北京: 人民出版社, pp. 320-343

주춤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기능의 전환, 행정관리 방식의 개혁, 기구간소화, 법률제도의 완비 등이 이루어졌다.<sup>2)</sup>

중국의 1980년대 정치개혁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회복하고 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의 합리적 배분을 시도했다면, 1990년대 정치개혁은 천안문 사건 이후 국가-사회관계를 재정립하고 당과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즉,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법의 수정과 더불어 주민들에 의한 지방 인민대표 선거의 범위가 현급(縣級)까지 확대되었고 촌민자치를 위한 기층선거가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향진장 직접선거도 한 곳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어 2004년에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sup>3)</sup>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제도와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을 선언한 직후 중국 공산당 개혁파 지도부는 개혁 이전의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주의에서도 민주 실현이 핵심 목표임을 표명하였다.<sup>4)</sup> 즉, 중국은 건국 후 30년 동안 스스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착오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레닌주의적 해석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적 관점보다는 통치방식에서의 민주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훼손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 전복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영도’ 즉 ‘공산당의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정치개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첫째, 중국 당국은 서구식 민주 즉 다당제 민주 그리고 그 틀 하에서 이뤄지는 삼권분립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둘째, ‘민주화’가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을 제시하며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를 상정하고 있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원천 봉쇄하고 ‘위로부터의 민주화’ 즉 공산당 주도의 민주화를 시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특히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시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논쟁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2) 编写组. 1987. 『政治体制改革资料先编』.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pp.109-110; 郑谦 外. 1988. 『当代中国政治体制发展概要』. 北京: 中共党史资料出版社.

3) 선거방식에서도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과 복수 후보제도 그리고 유권자 후보추천 제도의 채택 등 보편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 중국에서 선거제의 구현은 중국정치가 ‘인치’에서 ‘법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제도 중 하나이다. 사실상 중국에서 선거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며 지도자 임기 종신제,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등액선거제(等額選舉制), 거수에 의한 표결 등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중국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기층에서 선거의 구현은 대중의 정치참여 패러다임의 민주적 전환을 상징한다. 이흥규. 2009. “중국식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층선거의 성과와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1호. pp.111-151.

4)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역사결의> 문건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 (1981年6月27日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六次全体会议通过) 『中国共产党新闻网』,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7/71588/4854598.html>

는 중국의 굴기가 시작된 시기로서 ‘중국식 민주’를 추구하며 나름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공산당의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진핑 시기는 ‘중국식 민주’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진핑 시기의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는 미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고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논리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시진핑 집권 직전 시기인 후진타오 시기는 중국식 민주를 선양한 시기였으나 동시에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급격히 확산된 시기이기도 했다. 둘째, 이러한 불안정 국면이 새로운 권위주의로의 강화를 소환했고 최고지도자 직위를 승계한 시진핑은 이를 자신으로의 권력 집중의 기회로 삼았다.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그동안 그나마 중국식 민주の内容으로 내세우던 중국의 정치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이러한 시진핑 시기의 중국 정치개혁의 퇴조와 ‘중국식 민주’의 와해는 미중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지칭하며 체제경쟁을 예고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II.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식 민주’ 비전과 정치적 불안정

중국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즉 후진타오 시대는 민간에서의 활발한 민주 담론 논쟁<sup>5)</sup>에 호응하여 ‘중국식 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비전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시기였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식 민주 이념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여 이러한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sup>6)</sup> 2006년에는 후진타오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중국 국가편역국 부국장 위커핑(俞可平)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담론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해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라고 주장해서 주목을 끌었다.<sup>7)</sup> 이는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후진타오도 국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2006년 말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으며 2007년 17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민주’의 이념과 실천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민주’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개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8)</sup> 중국 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당제 대신 공산당

5) 200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중국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었고 그 구체적인 민주화 방향과 실현 형태에 대하여서는 더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예컨대 당시 중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선거민주주의론, 자유민주주의론, 심의민주주의론, 엘리트민주주의론, 다원적민주주의론, 민주사회주의론 등으로 민주화 담론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何增科, “民主化: 政治发展的中国模式与道路”, 俞可平(编), 『中国学者论民主与法治』(重庆: 重庆出版社 2008), pp81-84.

6)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中國的民主政治建設>白皮書”, 『新华网』 2005年10月19日.

7) 阎健 编, 『民主是个好东西: 俞可平访谈录』(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8) 郭立青, “智囊建立合法性新論述背後” 『亞洲週刊』 二十一卷 二期 (2007-01-14); “胡锦涛在中国共

‘당내 민주’를 실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제 기능 활성화, 非공산당 정치세력과의 협력체제 강화, 기층선거제도의 심화 등을 통해 ‘인민 민주’ 즉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것임을 제시했다.

물론, 중국 지도부가 주창하는 ‘중국식 민주’는 ‘사회주의민주’를 실현하되 공산당의 영도(党的领导), 인민주권(人民当家作主),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国) 등 세 요소의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는 여전히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 노선을 의미한다.<sup>9)</sup> ‘사회주의민주’의 다양한 논쟁 속에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가 중국 당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민주’의 공식 목표임이 정립되어온 것이다.<sup>10)</sup>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식’ 민주 선양과 관련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2008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한다.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양상이 대거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려던 2008년부터 중국 정부에 항거하는 소수민족 즉 티베트인들, 위구르인들의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으며 상호 공격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2008년 12월 중국 내 반체제 민주주의자 303명은 중국의 정치체제 사회체제 개혁,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 종식, 삼권 분립, 민주화 추진, 인권 상황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인 <08 헌장(零八宪章)>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진타오는 2008년 말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식에서 북방 방언인 ‘부저텅(不折腾)’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09년에는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무리한 정치개혁은 않겠다는 입장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굴기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져갔다.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로 올라서는 2010년의 경우 중국에서 빈부격차 등에 항의하는 시위만도 18만 건 발생했는데 이는 2008년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한 ‘2006년 중국 내 시위발생건수’인 9만 건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이었다. 더욱이 조사 결과 하루 평균 490건가량 발생하는 시위 중 대부분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1)</sup>

그러자 2010년에 이어진 중국 공산당 당내의 정치개혁 논쟁은 더 격화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9월 선전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전시가 주도하여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정치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성과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도발적인 발언이었다. 원자바오는 이후 6주 동안 7차례나 이어졌다. 원 총리는 선전에서 발언 이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다보스 포럼 연설, 뉴욕에서의 중국 기자단 회

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新华网』2007年10月24日..

9)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100년간은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초급단계(社会主义初级阶段)’론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温家宝, "关于社会主义初级阶段的历史任务和我国对外政策的几个问题"『新华网』2007年2月26日.

10)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로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中国特色社会主义政治发展道路)’로 인식하고 있다. 人民日报评论员, "坚持社会主义政治制度自我完善和发展"『人民日报』2008年3月10日.

11) "[후진타오 10년의 명암] (하) 정치·경제 갈등 과제". 『서울신문』2012년 11월 12일 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05015016>

견, 유엔총회 연설, 국경절 연설 때에도 중국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sup>12)</sup> 원자바오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변한 후진타오와는 달리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2011년 2월 튀니지의 재스민 민주혁명을 지지하고 중국도 민주화를 이루자는 중국 판 재스민 운동(中国茉莉花活动)이 온라인을 통해 결의되어 중국의 13개 주요 도시에서 산발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기간 동안 중국의 정치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개혁의 성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한 데 반해서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강조하며 중국의 국정에 기반하여 삼권분립이나 다당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sup>13)</sup> 물론 공산당의 영도를 주장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했지만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방점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2011년 6월 유럽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에서 자유와 진정한 민주를 실현할 것이며 미래의 중국은 민주법치와 공평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국의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sup>14)</sup> 2011년 말 환구시보(環球時報) 여론조사센터가 7개 도시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7.2%가 ‘민주’는 좋은 것(民主是个好东西)’이라는데 동의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민주가 대세’라는 데도 응답자의 77.2%가 동의했던 반면 반대 응답은 12.0% 이었다.<sup>15)</sup> 2012년 시진핑의 집권 이전까지1 중국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시진핑(習近平)에게 물려준데 이어 20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끝으로 국가주석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일선에서 완벽하게 은퇴했다. 그의 깨끗한 은퇴는 당 총서기 은퇴 이후에도 2년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놓지 않았던 장쩌민(江澤民)전 주석과 비교되었고 최고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중국의 정치개혁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16)</sup>

- 
- 12) “원자바오, 6주간 7차례나 '정치개혁' 역설”. 『조선일보』 2010년 10월 5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011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0114.html)
- 13) “温家宝：没有政治体制改革 经济体制改革不可能成功” 『中国人大网』 2011.3.14.  
[http://www.npc.gov.cn/zgrdw/npc/dbdhhy/11\\_4/2011-03/14/content\\_1646511.htm](http://www.npc.gov.cn/zgrdw/npc/dbdhhy/11_4/2011-03/14/content_1646511.htm);  
 吴邦国.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工作报告—2011年3月10日在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四次会议上” 『中国人大网』 2011. 3.10.  
[http://www.npc.gov.cn/wxzl/gongbao/2011-07/08/content\\_1665568.htm](http://www.npc.gov.cn/wxzl/gongbao/2011-07/08/content_1665568.htm)
- 14) “원자바오 “中, 미래 민주법치국가 될 것””. 『연합뉴스』 2011. 6.28.
- 15) 环球舆情调查中心, “公众对民主的认知现状调查报告”. 『环球网』 2011.12. 1.(검색일 2017. 1. 5)  
<http://opinion.huanqiu.com/1152/2011-12/2225584.html>. 이 여론조사는 2011년 11월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화조사의 방식으로 중국 내지의 7개 권역 즉 화베이(华北), 화둥(华东), 화남(华南), 화중(华中), 시난(西南), 시베이(西北), 동베이(东北) 등의 대표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창사(长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선양(沈阳) 등 7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이 여론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09%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 16) 홍콩의 시사평론가 청샹(程翔)은 “안정된 정치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진타오가 자신의 권력을 일시에 내려놓은 것은 후진타오 권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후진타오는 장쩌민 세력에 의해 군권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sup>17)</sup> 정법 부문 즉 공안, 사법,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저우융캉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러한 형국에서 후진타오의 비서격이었던 링지화(令计划) 마저도 저우융캉 등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권력연합을 결성하여 후진타오의 권력 약화를 초래하였다.<sup>18)</sup>

따라서 후진타오 집권 10년은 최고 권력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시대였다. 즉 경제성장이나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빈부격차 확대와 부패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통치의 합법성(legitimacy)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였다. 후진타오 시기까지 추진되어온 개혁개방 정책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과 모순을 낳아 사회적 불만 기류가 상승되고 대중적 저항이 나타났던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이 중국 사회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중국인들의 민권 의식을 크게 자극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정국 장악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도전 즉 군체성 사건이라 불리는 대중 시위도 빈번하게 발생했다.<sup>19)</sup> 2000년대 들어서는 90년대까지 주변화되어 있었던 좌우의 급진주의가 다시 만연하게 되는 등 중국의 정치사회 안정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 III. 시진핑 시기의 ‘신권위주의 2.0’ 체제 구축과 ‘중국식 민주’의 와해

2012년 18차 당대회로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을때에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식 민주’ 실현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 방향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곧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철저히 갈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단지 ‘사회주의민주정치’ 발전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던 2007년 17차 당대회에 비하여 ‘중국특색’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예컨대 집권 초기였던

17)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2004년까지 유지하면서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군부 내 자파 세력을 군권의 핵심으로 공고히 해 중앙군사위 주석을 승계한 이후에도 군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또한 장쩌민 퇴임 이후에도 후진타오는 명의상의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불릴 정도로 역대 가장 취약한 중앙군사위 주석이었고 실제 중국의 군권은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궈보슝과 쉬차이허우가 양분했다. 楊念軍, “嫻嫻來遲的大裁軍” 《明鏡月刊》第69期

18) “内幕：五老虎非法聚会被通报 一场惊心政变未遂” 万维读者网 2019-06-07

<http://news.creaders.net/china/2019/06/07/2099655.html> 보시라이(薄熙来),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링지화 등이 신(新)4인방으로 불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뒷배가 된 장쩌민이 당시 마오쩌둥에 비견될 만한 권력을 행사했던 셈이다.

19) 이러한 내용은 2012년 8월 말 중앙당교의 기관지 《学习时报》의 부편집장 덩위원(邓聿文)이 쓴 것이다. 당시 중앙당교의 교장은 시진핑이었다. 邓聿文, “胡温的政治遗产” 《财经网》2012年8月30日; 《儒家网》2012年9月2日에서재인용 <https://www.rujiagz.com/article/2908>

20) 이는 17차 당대회 보고와 18차 당대회 보고를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대회 보고는 다음을 참조하라.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全文)” 『人民网』2007年10月15日. (<http://cpc.people.com.cn/GB/104019/104099/6429414.html>);



2014년 9월5일 시진핑은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주의는 새로운 것이며 또한 좋은 것이다(中国特色社会主义民主是个新事物，也是个好事物)”라고 규정했다.<sup>21)</sup>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퇴조하고 강력한 통치체제가 다시 구축되고 있다. 후진타오 이후 집권한 공산당 최고지도부에게 요구된 것은 강력한 권력 기반에 근거하여 권력 상충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되 후진타오 시대에 난무했던 대중 시위를 통제하여 사회 안정에 도달하는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의 구축이었다.<sup>22)</sup> 예컨대, 2013년 중국의 국내외 안보를 위해 신설한 국가안전위원회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산하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것은 국내외 안전 부문을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기 위한 방책이다.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최소화되었던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이 시진핑 집권 이후 강력하게 지속된 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팽배해왔던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야심가형 정적들을 부패혐의로 사전에 제거하여 최고지도자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궈보슝, 링지화 등 과거 최고지도자의 권력 약화를 초래한 다른 야심가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호랑이 때려잡기(打虎)’로 표현되는 이러한 최고 권력엘리트들의 부패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관되고 단호한 처벌은 굼직한 정치개혁 없이도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대중적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 체제는 확연히 후진타오 시대에 비해 특별한 정치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갖가지 영도소조(领导小组)가 만들어지고 시진핑이 소조장을 직접 맡는 것은 사실상 정부 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과거 당내 개혁파의 정치개혁 추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돌파구였던 당정분리(党政分开)를 완전히 포기하고 당의 일원화 영도 즉 당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정치적 보수화로 평가된다.<sup>23)</sup>

또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기업 내 공산당 조직 설립을 가속화했다. 2015년부터 중국은 기업 내 공산당 조직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공산당 당장 제5장에 따르면 기업은 사내에 당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당 기층 조직(산하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말 중국은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12年11月8日)”『人民网』2012年11月18日.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1.html>)

21) “习近平：设计和发展国家政治制度 要从国情出发从实际出发”『新华网』2014年9月5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9/05/c\\_1112384483.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9/05/c_1112384483.htm))

22)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사학자 샤오공친(萧功秦)은 시진핑의 시대를 신권위주의 2.0 시대로 규정했다. 신권위주의 1.0 체제 즉 덩샤오핑(邓小平) 시대 이후 계속된 경제개혁 체제 하에서 증폭된 사회적 갈등이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하여, 신권위주의 2.0 시대 등장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萧功秦：新权威主义2.0”『中国企业网』2014. 1.21; “萧功秦：从邓小平到习近平——中国改革的再出发”『凤凰网』2013. 12. 8.

23) 胡少江, “习近平从“改革共识”的倒退”『自由亚洲电台』2015.1.23

[https://rfa.global.ssl.fastly.net/cantonese/commentaries/hsj/hushaojiang\\_com-01232015102056.html?encoding=simplified](https://rfa.global.ssl.fastly.net/cantonese/commentaries/hsj/hushaojiang_com-01232015102056.html?encoding=simplified)

국유기업의 93.2%, 민간기업의 67.9%가 당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70%에 당 조직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은 시진핑 집권 이전인 2012년(4만7000여 곳)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sup>24)</sup> 이는 명목상 개혁개방 이후 정식화된 정치개혁 명제인 정부와 기업의 분리(정기분리)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당과 기업의 분리(당기분리) 없이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기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시진핑 1인에게로의 권력집중은 공산당의 집단지도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흐름으로 읽힌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즈음한 시점부터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 중국 정치권력 구조의 뚜렷한 특징은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였다.

우선,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 시진핑에게 ‘핵심(核心)’ 칭호가 부여되었고 ‘영수(領袖)’의 지위도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는데 이는 당의 집단지도체제 자체를 해체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것이다. 2015년 말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시진핑에 대한 “‘핵심(核心)’ 칭호와 ‘영수(領袖)’의 지위는 2016년을 기점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변한 것이었다.”<sup>25)</sup> 시진핑에게 핵심 영수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는 중국이 전략적 변화와 위험이 존재하는 시기에 다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영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시 주석이 당 간부와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대국 영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 관변 매체의 시각이었다.<sup>26)</sup> 이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1인 권력이 공고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차 당대회 직후부터는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과 모든 정치국원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매년 서면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진핑에게 ‘영수(領袖)’의 지위가 공식 부여되었다.<sup>27)</sup>

둘째, 시진핑의 이념적 권위를 높이는 조치가 추진된 것이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이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되었고 2018년 헌법 수정에도 공식 삽입됐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이름을 딴 통치 이념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당장에 삽입되었는데 이는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론’은 지도자의 실명 없이 지도이념만 당장에 명기된 것과 비교하면, 시진핑의 통치이념은 마오쩌둥 사상이나 덩샤오핑 이론과

24) “中组部副部长齐玉:在企业设立党组织符合中国法律, 顺应企业员工愿望” 《中国经济周刊》 2017.10.20 <http://app.ceweekly.cn/?app=article&controller=article&action=show&contentid=207568>

25) 양갑용, “시진핑, 中 ‘집단 지도 체제’ 끝장내나?” 『프레시안』 2016.2.18.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33342?no=133342>;

26) “六中全会前夕 党媒推习近平为“核心领袖”” 『多维新闻』 2016. 10.24. (<https://www.dwnews.com//中国/59777278/六中全会前夕党媒推习近平为核心领袖>)

27) 시진핑이 이제 다른 상무위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무위원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자(director) 역할로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영수 호칭은 마오쩌둥과 화궈펑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개혁기에는 사용하는 것을 터부시했으나 시진핑이 새로운 영수로 등장한 것이다. 김용호,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의 집단영도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다양성+Asia> 2호(2018년 9월) <http://diverseasia.snu.ac.kr/?p=906>



같이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올림으로써 시진핑의 권력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했다.'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자연히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헌법 수정안에도 명기되었는데 이는 마오쩌둥에 이어 살아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이 헌법에 명기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이다.

셋째, 시진핑의 물리적 통제력도 강화되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과 함께 후진타오로부터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계승받게 됨으로써 조기에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국내외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당 중앙 직속으로 설치된 것은 이전까지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별도로 관할하던公安부문을 격하시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위원회 주임으로써 당 정법위를 지휘하여 경찰력도 직속 하에 놓게 되었다.<sup>28)</sup>

넷째,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통 중국의 최고지도자 집권 1기를 마친 후 열린 당대회에서 후계자 후보군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시킨던 관례가 19차 당대회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이는 전임 최고지도자가 차기 최고지도자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규정이 시진핑 집권 시기에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격대지정의 원칙이 관례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기 지도자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었다. 더욱이 시진핑의 최측근이던 왕치산(王岐山)이 70세의 나이에 국가부주석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최고위급 지도자군의 은퇴 여부를 결정짓던 7상8하의 관례가 무시된 것으로서 향후 2022년 20차 당대회 시기가 되면 69세가 되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더욱 높였던 것은 2018년 3월 헌법수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이 폐지된 사실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할 사실은 보통 2018년 가을에 열렸어야 할 19기3중전회가 2018년 2월 말에 앞당겨 소집되어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논의한 점이다. 이는 시진핑 세력이 19기3중 전회 개최 이틀 전에 갑자기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의 폐지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이며 군대, 경찰력을 장악한 권력에 기반하여 사실상 강압적 분위기에서 중앙위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낸 것이었기 때문이다.<sup>29)</sup> 물론 19기3중 전회가 끝난 뒤 곧바로 2018년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담은 헌법 수정안이 통과된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시진핑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정

28) 후진타오 시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저우융캉이 당 정법위원회 서기로서公安을 지휘했고 이러한 경찰력은 저우융캉-보시라이 권력 연합의 물리적 기반이었다.

29)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홍얼다이(紅二代) 출신인 전 중국공산당 당교 교수 차이샤(蔡霞)의 증언이다. “红二代中央党校蔡霞怒怼复旦张维为谈修宪取消任期限制，蔡霞说了什么被开除了党籍” <https://www.youtube.com/watch?v=fCnX7RCHcJo>

치개혁을 중단하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재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초기만 해도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권력 집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 발생한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 폐지를 위한 전격적인 헌법수정이 시진핑 세력의 의도된 정치행위를 통해 시진핑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나타나자 상황은 다시 변화되었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당내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시도해온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하에서 1인으로서의 과도한 권력집중은 거꾸로 당내 반발을 심화시켜 오히려 향후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 수정이 있었던 2018년 3월 이후 중국공산당 당내에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2018년 가을 이래 2019년 3월 양회(兩會) 직전까지 응당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은 개혁개방 선언 40주년의 시점이었기에 경제개혁의 새로운 결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관례를 깨고 19기4중전회는 양회 전까지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 2019년 가을에서야 개최되었다.<sup>30)</sup> 이는 향후 개혁노선과 관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사이의 합의 실패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최근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2019년 3월의 양회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강조점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정협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위한 작품”을 만들고 ‘인민’을 대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민’을 키워드로 강조한 반면,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대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화’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자면서 ‘시장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sup>31)</sup>

지도부 사이의 노선투쟁을 암시하는 이상징후는 2020년 양회에서도 다시 재현되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올해 원년으로 선언한 빈곤 탈출이 가능하겠나”는 질문을 하자 “현재 중국인 6억명이 매월 1,000위안(약 17만원)을 번다”며 “중급도시에서 집세, 세금 내기도 부족한 수입이다. 거기다 전염병까지 닥쳤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시해온 빈곤 탈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sup>32)</sup> 이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완성을 약속했던 시진핑 주석의 1월 신년사를 부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양회에서 불거진 노점경제(地攤經濟)를

30) 양회 개최 이전에 특히 개혁개방 40년을 경축해야 하는 시점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다. 이는 중국 정치체제의 내재적 논리에서 본다면 양회에 대한 공식적인 ‘당의 영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양회 개최 6개월 즈음 전에 관례적으로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정권의 집권2기 핵심 경제개혁 결정이 제시되지 못한 셈이다.

31) 예컨대, 리커창 총리는 ‘감세’와 각종 경비의 절감, 융자 지원 강화 등을 친기업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혁신 능력 향상, 강대한 내수시장 형성 등을 2019년 정부 업무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시진핑이 주도하던 ‘공급측 개혁’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상당히 중시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시장화’ 개혁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2) “李克強：中国6亿人月收入仅1000元，人均年收入3万元” 『中国政府网』 2020年5月29日

<https://www.weibo.com/1618051664/J47oYnjOh?type=comment>

둘러싼 논란은 시진핑과 리커창의 노선이 확연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 IV. 중국의 굴기 시대의 시진핑 권력 강화와 미중관계

2008년 미국발(發)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가주도적 발전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갔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즉 이제 ‘중국의 굴기(The Rise of China: 中國崛起)’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객관적 현상이 되었다.<sup>34)</sup> 이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러므로 양자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패권국 미국의 국제질서 운용에서 최대의 동반자로 호명되었다.<sup>35)</sup>

그런데 2012년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China Dream: 中國夢)’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망을 명확히 드러냈다.<sup>36)</sup> 중국은 또한 국유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구축을 중시하면서 이를 새로운 체제비전으로 제시해 왔다. 중국은 전면적 개방을 넘어 이제 중국은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 강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일대일로 구상을 내놓았으며 그 기반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수립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도 구축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과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립하면서 평등과 혁명 정신을 중시하는 마오주의(Maoism)의 유산도 다시 긍정하면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모색하여 왔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당장(黨章)에 삽입하고 향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새로운 개혁 임무를 설정하였다. 이는 시진핑 시대가 개혁개방 1.0 단계를 넘어 개혁개방 2.0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 1.0 시대에 심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잘사는 공동부유(共同富有)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이며, 이는 곧 사회주의 성격을 회복한 초강대국을 의미한다.<sup>37)</sup> 개혁개방 1.0 시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33) 리커창 총리는 5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된 정부 업무보고안에서 ‘이동노점경영 장소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合理设定流动摊贩经营场所)’는 문장으로 노점경제를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 “政府工作报告——2020年5月22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 『新华网』 2020年6月1日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6/861a06a4c105447e9cc57bb44ae1f924.shtml>

그런데 6월4일부터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공산당 선전부는 주요 언론에 노점경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외적으로 중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세력인 일부 지방정부 지도자와 매체가 노점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4) 전성홍, 2008. “‘중국의 부상’,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한 재평가”. 전성홍, 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오름, pp13-36.

35) “Obama: U.S.-China relations to shape 21st century” *USAtoday*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9-07-27-obama-china\\_N.htm](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9-07-27-obama-china_N.htm)

36) 시진핑이 당 총서기로 처음 등장한 중국공산당 18기1중전회 직후인 2012년 11월 29일 공개적인 대외행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전국민과 민족에게 호소하는 ‘중국몽(中國夢)’ 연설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중국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37) 성균중국연구소 편역, 2018.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서울: 지식공작소. 서문

여 사회주의/자본주의 체제 논쟁을 금기시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 개혁 개방 2.0 시대는 서방의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새로운 체제경쟁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에 기반 하여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중국몽을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미중 관계를 대 결적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오히려 시진핑 시대의 중국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미국 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국유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출 지 원을 하여 세계경제에서 국제경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라 보고 이러한 지 원을 중단하는 국유기업 개혁 요구를 해왔지만, 시진핑의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국영기업 개 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진핑의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체제 이념을 고수하며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왔 다.<sup>38)</sup>

이러한 국면에서 덩샤오핑 시대 이래 추진되어온 기존의 정치개혁조치 무화시키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시진핑 1인으로서의 권력 집중 그리고 중국 공 산당의 사회적 통제 강화는 미국이 중국 체제의 문제와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특히 서 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집권 이래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정적들을 숙청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명분으로 삼아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은 시진핑 자신이 이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비난,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장쩌민 시기부터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내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미국의 대표적인 친중파 중국연구자였던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조차도 일찍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이를 막고자 추진하는 시진핑(习近平)의 강력한 독재가 오히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sup>39)</sup> 샴보의 발언은 시진핑의 1인 권력 강화를 ‘약 한 고리’로 삼아서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확신이다.

이와 관련하여 7월23일 있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은 미국의 시각을 정확히 보여준다.<sup>40)</sup>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

p2.

38) 시진핑 국가주석은 수장을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에서 "국유기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 정치적 기반이자 당의 통치와 국가 부흥을 위한 핵심 축이며 힘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China approves plan to boost prominence of state firms, despite complaints from trade partn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8,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92339/china-approves-plan-boost-prominence-state-firms-despite?utm\\_term=Autofeed&utm\\_medium=Social&utm\\_content=article&utm\\_source=Twitter#Echobox=1594216059](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92339/china-approves-plan-boost-prominence-state-firms-despite?utm_term=Autofeed&utm_medium=Social&utm_content=article&utm_source=Twitter#Echobox=1594216059)

39) David Shambaugh, "The Coming Chinese Crackup" *Wall Street Journal* 2015. 3. 6.

<http://www.wsj.com/articles/the-coming-chinese-crack-up-1425659198?mod=e2fb>

40) Michael R. Pompeo,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Speech on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uly 23, 2020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그는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이며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며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을 결성할 때이다."라고까지 말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로 정치체제로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통해 중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결국 시진핑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40년의 역사에서 정치개혁이 퇴조한 과거로 되돌아간 '역행의 시대'로 기억되고 이러한 시진핑 1인 권력과 공산당의 사회적 통제 강화를 세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시작한 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미국은 서방 각국의 시민사회와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되도록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동시에 중국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공산당의 영도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적 통제를 쉽게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가능한 가장 큰 중국 정치의 변화는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온건파로 교체되는 것이겠지만 이는 순전히 중국 공산당 권력엘리트들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달려있다.

---